

# “뭐가 그리 두렵나... 용기있게 고백하자”

**5·18 계엄군의 고백**  
<7> 신순용 3공수 11대대 지역대장

진실 밝히는게 참회하는 것  
양심선언 후 마음 편해졌다  
계엄군 등 증언 이어지길...  
신상보호 방안 논의도 필요

“광주시민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계엄군에게 먼저 총을 쏘지도 않았는데 자위권 운운하며 군의 집단발포를 정당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루빨리 행방불명자들이 발견돼 유가족들의 한이 풀리길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시민군 3명을 사살해 암매장했다’고 증언한 3공수여단 11대대 4지역대장 출신 신순용(69·당시 소령)씨는 “증언 이후 마음이 편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일보 인터뷰를 시작으로 전국 신문·방송에 잇따라 증언하며 5·18 진실을 알렸다. 지난해 11월에는 5·18기념재단이 추진한 옛 광주교도소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조사에도 참여했다. 신씨는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의 암매장 상황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 성의껏 전달했다.

애초 우려했던 신군부 잔존세력의 협박·희유, 5·18 유가족들의 항의도 없었다. 유가족들은 오히려 진실을 증언한 신씨에게 고맙다고 했다. 신씨도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신씨는 다른 계엄군들이 증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신씨는 “지역대장 중에서 고참이었던 난 작전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서 3공수여단의 5·18 작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알 수 있었다”며 “사병들은 전반적인 작전 상황에 대해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독재 시절에는 진실을 말하면 역도(逆徒)로 불리는 분위기였다”며 “계엄군들에게 진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공수여단 소령 출신 신순용(가운데)씨가 지난해 11월 5·18기념재단이 추진한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조사에 참여해 5·18 당시 상황과 암매장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이번 달 광주일보와 만난 3공수여단 출신 김연철(61·당시 하사)씨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광주가 고향인 김씨는 5·18 당시 광주교도소 부지에 시민군 시신 8구를 직접 묻었다고 지난해 5·18재단에 증언했고 암매장 조사에도 참여했다.

김씨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게 두렵지 않다고 했다. 얼굴이 공개되는 것보다 마음 속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했다.

그는 “지난 38년 간 계엄군으로 광주에

출동했다는 사실을 가족 등 주변에 알릴 수가 없어 혼자서만 끔끔 앓았다”며 “모두 털어놓으니 후련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처럼 다른 장병들도 증언을 하면 좋겠다고 바랐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20사단 일병 출신 정보(59)씨는 ‘그동안 20사단 출신 사병들의 증언이 없었다’는 사실에 의아해 했다. 사병이었던 자신보다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무엇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는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다만 정씨는 “과거 광주 투입 사실을 딱 한번 지인에게 말했다가 욕설을 들었다”며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에 있었던 11공수여단 출신 이모(61·당시 중위)씨는 “모든 것은 전두환이 저지른 것 아니냐. 전두환을 범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증언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계엄군은 여전히 증언에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다. 증언을 하고 싶어도 ‘정권이 바뀌면 다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씨는 “다른 계엄군들은 자녀 등 가족들에게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우려에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9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용기있게 증언한 계엄군들에 대한 신상보호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5·18재단 관계자는 “5·18 관련 기록이 왜곡된 상황에서 계엄군들의 증언이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5·18 초기부터 항쟁 이후까지 광주에 머물렀던 7공수여단 출신 계엄군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시민정치페스티벌 열기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개최된 ‘시민정치페스티벌 광주시민총회’에서 시민들이 발표된 정책에 대해 찬성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축산농가협회 지부 여직원 문자로 유서 남기고 숨겨 유력인사 13명에 매년 보낸 선물 상납리스트도 포함

한돈, 한우, 양계 등 5개 축산농가협회 모 지부 여직원이 ‘지부에서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형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곡성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축산농가협회 모지부 간사인 A(여)씨가 번개탄을 피우고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공금사용처와 관련 구설에 오른 A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냈

다. 여기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부에서 수년 동안 지역 유력인사 13명에게 매년 한차례씩 각각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낸 상납리스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는 5년 전부터 한우, 한돈, 낙농, 양계, 오리 등이 포함된 5개 협회 간사로 근무하면서 협회 총무를 겸직해왔다. A씨는 지난 3월 대한한돈협회에서 지원받은 600여만원의 자조금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일자 협회를 그만두고 조카가

살고 있는 구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내왔다.

유족들은 “고인이 ‘일부 금액이 차이나는 점은 인정하지만 결코 횡령은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이 남긴 메모를 토대로 선물을 건네준 시점 등에 따라 김영란법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1명 추가 구속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 광안경찰은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집단폭행 피해자(31)와 일행 한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가해자 일행 8명 중 폭행을 주도한 박모(31)씨 5명을 구속하고 한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초기 확보한 동영상에서 한씨 등 3명은 일행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거나 등장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러나 추가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들이 폭행에 일부 가담하고 범행을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행 8명 모두 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정황도 함께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

##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법원 판결 잇따라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가동 연한’이 1심이 60세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65세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와 충돌했고, 장기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A씨에게 20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2월 수원지법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B(당시 60세)씨는 2013년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당시 재판부는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에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 주택서 노부부 숨진채 발견

지난 21일 오후 4시 20분께 화순군 이양면 한 주택에서 A(67)씨와 아내 B(60)씨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에게 반찬을 전해주러 간 주민이 창문 너머로 부부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부엌에서 방을 향해 쓰러져 있

었고 B씨는 방안에서 A씨를 바라보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 내부 출입문은 잠겨 있었지는 않았으나 모두 닫혀 있었으며 바닥 난방 장치가 가동 중이었다. 경찰은 부패가 심해 반찬을 전해주러 간 주민이 창문 너머로 부부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순=배영재기자 byj@kwangju.co.kr

## 대령·소령이 여군 하사와 불륜... 대법 “해임은 적법”



○여군 하사들과의 불륜으로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드러나 해임됐다.

○육군은 이 하사와 김 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는데, 1·2심은 “원고만의 책임은 아닌데 하사들에겐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단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부하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군의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린 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 /연합뉴스

○여군 하사들과의 불륜으로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드러나 해임됐다.

○육군은 이 하사와 김 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는데, 1·2심은 “원고만의 책임은 아닌데 하사들에겐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단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부하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군의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린 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